

“학교급식, 주춤하고 말것인가”

급식확대위해 예산확보 우선돼야 장기적인 식단의 개발및 연구시급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건강과 영양문제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영양교육에서 나아가서는 사회교육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사진은 연희학교의 급식장면)

학교급식이 본연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
생들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하고, 맛과 영양가
가 높은 식단의 개발 및 연구
가 뒷받침돼야 하며, 급식을

통해 영양교육에서 사회교육까지 포괄하여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관련 전문가들의 매서운 지적이다.

한때는 제6공화국 출범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학교급식.

우리나라 학교급식 수준은, 비교적 잘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선진국과 견주어 볼 때 극히 취약한 교육부문 중 하나로 학교급식 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고 80년대 중반이후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 중요성의 공감대가 부분적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확산기미가 보였으나 결국 정부의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타 교육사업에 비해 낙후된 부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90년 2월 현재 학교급식률은 전국 7천6백39개 국민학교 중 7백65개교만이 급식을 받고 있어 학교수 기준 10%, 학생수 기준 6.1%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산확보를 위한 지원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동안 학교급식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배정되었으나 이 재원은 학교중설, 교원확보, 학교운영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어 옴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배정은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 뒷걸질 되었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뒷배기이다.

또, 학교급식업무를 맡는 소관 행정부서가 정책당국자의 인식부족에 의해 보사부에서 문교부로,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부에서 문교부(현재 교육부)로 거듭되는 이동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급식의 절립들로 제거해야 할 부분은 비단 이것들만이 전부는 아니다. 가령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학교급식 시행을 담당할 전문행정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급식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좋은 급식물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 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오는 2천년까지 현재 10%의 급식률을 50~70%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의 당면과제도 풀어 나가지 못하면서 그때 그때만 모면하려는 의도적인 도피성의 계획만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구랍 22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골자를 보면 종전에는 학교급식 실시학교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장이 시·군·구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사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인접한 그이상의 급식학교의 장은 급식관련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청

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1명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학생의 수는 4백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 확대와 관련 대한영양사회 조정순 회장(명지대학교수)은 “학교급식의 시작은 빈곤아동의 구호였으나 근래의 학교급식은 건전한 발육을 위한 영양공급이며 영양교육의 일환임은 여러나라의 공통적인 추세”라고 말하고 “따라서 식품비의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에 있어 학부모 소득 수준별 부담별 적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급식비 보조가 있어야 한다”며 급식유형별 획일적인 부담율의 적용은 급식학교내의 결식아동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그 대상이 장래에 이나라 주역이 될 성장기 아동이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선진국과 같이 당장에 높은 급식률을 따라 가야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통해 하나하나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요구사항이다.

지금부터 13년전 서울시내 모 학교에서 빵으로 인한 식중독사건이 아찔할 정도로 눈에 선하다.

우리나라 2세 국민을 바르게 기르기 위한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대명제 속에서 좀더 소신과 성의를 갖고 급식확대를 펼쳐 나가야 바람직할 것 본다. <노의근 기